

비판이론의 학술적 공헌과 실천적 함의: 한국외교를 중심으로*

은용수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주지하듯 비판이론은 국제정치학계(IR)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이론적 시각이지만, 본 논문은 비판이론이 학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한국 외교의 '실제(practice)'에 대해 비판이론이 제공하는 시사점에 주목한다.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경쟁적 질서 '내부'에서 도출된 정책(미국 중심 vs. 중국 중심, 혹은 이른바 연미화중)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대결적 질서의 '변형'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그러한 질서가 '구성된' 사회역사적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한국외교는 비판이론이 강조하는 행위자의 언어 및 지식의 구성(인파)적 기능과 지식권력의 문제를 보편적 차원에서 성찰하여 지난 수십 년간 외교적 실천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했던 '담론적 제약'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비판이론, 성찰, 한국외교, 담론적 제약, 전략적 딜레마, 중견국 외교

* 본 논문에 매우 유용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토론을 통해 매우 좋은 의견을 주신 제주평화연구원의 도종운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논문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 있고, 그것은 온전히 저자가 감당할 몫입니다.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을 밝힙니다(NRF-2013S1A5A8023448).

I. 서론: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의 기원과 인식적 기반

비판이론의 사상적 뿌리는 14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인본주의부터 17~18세기의 계몽주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게 퍼져 있으며, 그 줄기와 가지에는 칸트, 헤겔, 마르크스, 니체, 베버, 그람시의 이론과 잠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로 대표되는 계몽적 역사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폭넓은 스펙트럼과 긴 역사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IR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판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론적 움직임은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 School)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Devetak, 2005; 2014).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불평등, 억압, 지배, 차별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회구조와 매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칸트의 비판철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궤를 같이 하면서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사회억압을 일으키는 현존체제와 구조로부터의 “해방(emancipation)”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¹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1960년대 들어서 아도르노(Adorno), 마르크제(Marcuse), 호르크하이머(Horkheimer), 하버마스(Habermas) 등과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진화되었고, 이 가운데서도 특히 하버마스의 활동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1968년 처음 출판된 그의 책 *Erkenntnis und Interesse(Knowledge and Human Interests)*에서 하버마스는 지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매우 좁게 규정된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서는 주지하듯 실증주의적 세계관에서는 과학적 지식은 곧 경험적 검증을 통과한 지식(따라서 비경험적 지식=비과학

1. 물론 마르크스주의와 비판이론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변혁적 ‘기제’에 관해 상이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후술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두 입장 모두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에 지적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적 지식)이라는 일차원적이면서도 동시에 ‘배타적인’ 도식이 성립된다. 하버마스는 이를 강하게 성토했고 지식의 유형을 넓히는 작업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에는 경험/분석적 지식, 역사/해석적 지식, 그리고 비판적 지식이 있으며 이 세 가지 지식의 종류에는 서로 다른 목적과 ‘관심’이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지식은 기술적 “예측과 통제,” 두 번째는 “실용적 이해,” 그리고 마지막은 자유증진을 위한 “해방”이 그것이다(Habermas, 1987: vii-5). 이러한 하버마스의 통찰은 실증주의의 ‘가치중립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써 실증주의 토대에서 생산된 경험적 지식 역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실증주의에서 주장하듯 이론과 관측의 분리와 이를 통한 ‘경험적’ 검증이 과학적 지식의 보장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산된 경험/분석적 지식 역시 ‘예측’과 그것을 통한 사회(자연)현상의 ‘통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고 따라서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객관주의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측과 통제든, 실용적 이해든 혹은 자유증진과 해방이든, 일정한 ‘가치’는 모든 지식의 구성과 지식생산과정에 투영돼 있기 때문에 결국 본질을 알고자 하는 이(the knower)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그런 가치가 생산되는 역사적 상황과 맥락(context)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Habermas, 1988: 17-18).

하버마스는 1960년대에 들어서 앞서 말한 지식구성, 관심과 목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른바 의사소통행위론(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을 정립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언어는 사회의 토대가 되는 요소이고, 인간행위에 대한 이해는 언어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통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는 가정(assumption)과 진리는 사회합의로부터 생산된다는 합의진리론(consensus theory of truth)을 출발전제로 삼고 있는 이론이다. 복잡하게 들리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성적, 규범적, 도덕적으로 따르게 되는 “이상적 담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이 있고 이러한 “이상적 담화상황”에서는 이해가능성, 포괄성, 도덕성, 진실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상반되는 여러 발언(주장)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를 합의를 통해 판가름 할 수 있

다(Habermas, 1988: 22; Stirk, 2005: 16-25). 그러나 여기서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점은 바로 위와 같은 “이상적 담화상황”이 현실의 여러 가지 왜곡과 억압의 문제로 인해 통상적인 의사소통행위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스가 논리적으로 이르게 된 귀결은 바로 “이상적 담화상황”을 왜곡하거나 혹은 방해/억제하는 구조와 요인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사회의 불균형적 권력문제나 정보의 왜곡과 은폐의 문제를 “이상적 담화상황”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여겼다. 달리 말하자면, 권력이나 왜곡과 같은 방해요인이 제거된 상황이라면 “이상적 담화상황”이 연출되어 결국 이성적으로 더 나은 주장(발언)만이 살아남게 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이론의 시각은 실증주의의 인식론과 매우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증주의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즉 이론과 관측대상)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치중립적” 분석을 강조한다. 이는 이론과 관측 혹은 가치(value)와 사실(fact)의 분리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란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엄격한 분리가 보장되어야만 하며 그러한 분리와 이를 통한 ‘가치중립적’ 연구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물론 칼 포퍼 이후의 신실증주의자(neopositivist)들은 가치중립성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객관적 지식생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가치중립성(value-free)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특히 1960년대 미국의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진 행태주의(behavioralism)의 강력한 인식적 토대가 되었으며 행태주의적 연구방법은 다시 실증주의라는 과학관을 강화시키는 상호의존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Bannister, 1987: 8, 83; Turner et al., 2011: 376-379). IR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예컨대 상당기간 IR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 행위를 행위자들의 동기나 감정보다는 “관측가능한(observable)” 환경구조적 요인을 데이터로 치환하여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태도는 데이비드 싱어, 월츠 등 많은 IR ‘주류’ 학자들의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에 “행태주의 혁명(behavioural revolt)”이라는 표현이 나오기까지 했다(Wight, 2013: 34).

주지하듯 행태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수량화, 정량화, 조작화(operationalization), 그리고 통계분석과 같은 관련된 연구방법의 사용이다(Halfpenny, 2014: 57). 이를 통해 이론과 관측,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서로 엄격히 분리될 수 있으며, 이론은 현상에 대한 관측을 통해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즉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분리와 연구자의 가치 및 신념이 철저히 배제된 “가치중립적” 분석은 조작화나 수량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Turner et al., 2011: 195, 200).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는 연구나 이론(예컨대 사회의 불평등, 부조리, 차별의 ‘해결’과 ‘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비판이론의 연구들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잘 알려져 있듯 실증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을 담보하고 이성적 연구를 보장하는 핵심은 바로 경험적 검증 혹은 반증이다. 경험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식론적 믿음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유행했던 시각(‘물리적 세상은 정확히 관측될 수 있다’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비엔나학파에 원류를 두고 더욱 확장/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지적주장들 중에서 경험적으로 검증 혹은 반증된 것(혹은 검증이나 반증이 가능한 것)만이 ‘과학적’이라고 믿는다(Halfpenny, 2014: 19-20). 관측과 경험, 그리고 검증 가능한(testable) 가설 및 이론의 설립을 과학적 지식생산의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여긴 것이다. 이는 경험적으로 관측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지적주장들은 무시되거나 혹은 “의미없는 것(meaningless)” 내지는 “단순 소설(mere fiction)”과 같은 것으로 치부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Patomaki and Wight, 2000: 217).

그러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견지한 비판이론의 인식론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분리 ‘불’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권력불균형이나 의사소통의 왜곡 및 정보의 은폐를 낳는 역사적 상황과 맥락, 그리고 사회구조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그러한 문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이론의 핵심기능으로 규정한다. 요컨대 비판이론가들은 중립적인 이론은 없으며 나아가 이론은 사회변혁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II. 비판이론과 국제정치학(IR) 주류이론²

1. 비판이론과 “문제풀이형” 이론(현실주의/자유주의)

이와 같은 비판이론은 사회학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실증주의의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아 왔으나, 그 연구의 범위가 개인이나 개별적 사회에 머물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하버마스 역시 최근에서야 (그것도 간헐적으로) 국제문제에 관한 언급한다(Habermas, 2003: 264-371). 하지만 IR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비판이론이 갖는 성찰적 태도와 지식구성의 목적과 이론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통찰을 ‘국제’ 정치의 문제로 확장한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IR에서 비판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적용한 초창기 1세대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앤드류 링크레이터(Andrew Linklater), 리처드 애슐리(Richard Ashley), 마크 뉴펠드(Mark Neufeld), 마크 호프만(Mark Hoffman), 로버트 콕스(Robert Cox)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특히 국제질서를 논하면서 “이론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며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theory is always for someone and for some purpose)”라는 콕스(Cox, 1981: 128)의 발언은 ‘IR의 비판이론’이 갖는 인식론이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전통적 비판이론과 마찬가지로 IR의 비판이론가들 역시 이론(theory)과 이론가(theorist)는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가치중립적 지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차원에서 콕스는 IR 이론도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이론을 소개한다. 하나는 그가 선호한 비판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이론과 대척점에 위치한 “문제풀이형(problem-solving)” 이론으로 명명된 유형이다. 이러한 구분은 앞서 살펴본 프랑크푸르트학파, 특히 호르크하이머가 “전통적

2. 이 부분은 저자의 즐고 “왜 메타이론인가”(출판 예정)를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 보완되었음.

이론과 비판이론” 제하의 글에서 전개한 것과 일치되는 것이기도 하다(Cox, 2012: 15-34). 흥미롭게도 콕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호르크하이머를 포함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글을 읽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으며, 나아가 콕스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비판이론 논의와는 다르게 비코(Vico)로 대표되는 계몽적 역사주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콕스와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이론의 지향점은 아래서 살펴보듯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전통적 이론은 자연과학을 모델로 하여 연구대상과 연구자, 이론과 윤리가 분리되는 가치중립적 접근을 추구하지만, 비판이론은 이와 반대로 그 둘의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연결과 결합을 강조한다. 콕스가 말하는 “문제풀이형” 이론 역시 전통적 이론의 성격을 띠면서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방법론을 ‘선호’하며 나아가 현존하는 사회정치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달리 말해 “문제풀이형” 이론은 현(現) 체제나 구조 ‘내(within)’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존 질서의 유지와 강화 혹은 재생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Cox, 2007: 207).

월츠의 신현실주의나 코헤인의 신자유(제도)주의가 바로 “문제풀이형” 이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IR 이론이라 할 수 있다(Devetak, 2005: 142). 이들은 모두 현존하는 국제정치적 질서와 속성(예컨대 무정부성과 힘의 정치 등)을 ‘주어진’ 현실내지는 변하지 않는 ‘상수’로 여기고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주장(예컨대 정책 결정의 신중함, 힘의 증강 및 균형, 국제기구 및 제도의 확장 등)을 제안한다. 신현실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는 현재의 국제정치질서 자체를 문제 삼고 그것을 변형하려하기 보다는 그 ‘내부’에서 그것과 ‘함께’ 작동하도록 자신들의 이론을 위치시킨다. 신현실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복잡한 국제정치경제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운용되는 것을 용이하게(facilitate the smooth operation)” 하는 것이 신자유제도주의의 목적이라는 코헤인 발언은 “문제풀이형” 실증주의 이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Keohane, 1984: 63). 현 질서나 체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증주의적 연구자들은 ‘가치중립적’ 태도를 취해야만 ‘과학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는 것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그 ‘내부’의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이론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비록 질서의 내부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질서 자체가 갖는 문제들,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외면하여 결국 ‘현’ 질서가 지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문제풀이형” 이론 역시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면서 가치가 배제된 실증적 연구방법을 내부의 문제풀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내세우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현존 질서의 ‘재생산’이라는 ‘가치’가 내재된 이론이다. IR의 비판이론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theory is always for someone and for some purpose”라고 말하면서 “문제풀이형” 이론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현 질서에 대한 “안정화 효과(stabilizing effect)”의 실체를 보여주고 문제시하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결국 국제정치연구는 “피할 수 없이 규범가치적이다”라는 마크 느펠드의 발언은 IR의 비판이론이 취하는 지향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증주의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Neufeld, 1995: 108).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이론 연구자들은 전 지구적 불평등, 권력과 정보의 왜곡, 국제기구의 부조리, 국가의 독재 및 부도덕한 전쟁, 국제사회의 ‘정치적’ 개입, 국가 주권 및 영토의 ‘배타성’, 지역 및 국제차원에서의 패권경쟁 등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야기하는 현실서과 현재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역사적 분석에 많은 관심/가치를 부여한다(Hoffman 1987; Neufeld, 1993; Brown, 1994; Cox, 1981; Linklater, 1990, 1992). 나아가 이러한 ‘가치 내재적’ 연구는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타당한 (혹은 실증주의의 언어를 빌려 말하자면 “과학적”인) 연구라고 믿는다. 요컨대 IR 비판이론은 실증적 세계관에 기반 한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주장과 달리,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나 국가의 합리성은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도 아니며 불변의 고정된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현 질서를 “부자연스럽게”(denaturalizing) 만들면서(Neufeld, 1995: 14) 결국 이를 통해 현 질서의 ‘내부’가 아닌 질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것은 곧 새로운 질서에 대한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현’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판이론가들에게 “세상을 아는 것과 그것을 변형하는 것은 불가분(know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world are inseparable)한 것”이라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Jackson, 2011: 160).

2. 비판이론과 구성주의: 존재론과 인식론적 유사성과 차이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IR 비판이론이 권력(power)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기존의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와 같은 “문제풀이형” IR 이론들 역시 기본적으로 권력에 관한 이론이지만 비판이론은 허칭스(Hutchings)가 지적하듯 다음과 같은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IR 이론은 정치[권력]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정치적(itself political)이다”(Hutchings, 1999: 69). 이는 IR 비판이론의 인식론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잘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IR이 “스스로 정치적이다”라는 말은 IR 이론(theory)과 이론가(theorist) 자신이 국제정치의 ‘현실’과 떼어 수 없는 관계이며 동시에 그것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위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론의 입장은 앞서 살펴본 실증주의와는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써 국제정치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비판이론이 IR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 역량(material capabilities)으로서 이해되는 권력문제라기보다는 푸코(Foucault)가 오랜 기간 지적해왔던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발생하는 지식권력(knowledge-power)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판이론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의 방법으로 이론적 “성찰(reflexivity)”을 강조한다(Cox and Sinclair, 1996: 19-38; Neufeld, 1995: chapter 3; Hamati-Ataya, 2014: 153-175). 여기서 이론적 “성찰”이라 함은 연구질문이 도출되고 지식이 생산되는 역사적

시공간과 현 질서에 대한 자의식이면서 동시에 그 질서와 시공간에서 이론가(자신), 그리고 이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구성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반성)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성찰”의 궁극적 목적은 기득권과 패권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이다. 즉 비판이론은, “성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는 물질적 역량으로써 이해되는 권력의 문제(예컨대 권력의 불균형, 지배와 피지배, 불평등의 문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self)”와 “공동체(community)”는 IR 비판이론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성찰”을 통해 국제사회의 현 질서에 내포된 억압성, 차별성, 배타성을 들춰내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율성, 개방성, 공동체성을 확장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비판이론의 존재론과 인식론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페미니즘 등 다른 이론적 시각과 더욱 활발히 접목되면서 좀 더 세밀해졌으며 최근 들어서는 비판이론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방법론’과 ‘방법’에 관한 논의도 (유럽의 IR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국제정치의 “성찰”의 문제를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오랜 기간 연구해온 크리스틴 실베스터(Christine Sylvester)는 최근 성찰적 페미니즘 연구가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으며, 남성적 사고에서는 인지되기 어려운 국제정치 권력구조를 문제시하는데 “주변화”된 여성이 오히려 인식적 우위에 있을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바 있고(Sylvester, 1994, 2013), 같은 맥락에서 르네 한센(Lene Hansen)도 국제안보연구에서 젠더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성찰적 안보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평화연구(peace studies)에서 국가나 제도의 “구조적 폭력”이란 개념을 제시하지만 여기서조차 여성은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안보학 담론의 확장과 개방을 주창한다(Hansen, 2000: 285-306; Sylvester, 2010: 607-614). 더욱 최근 들어 비판이론이 메타이론적 성격을 넘어 “경험적” 연구와 통약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연구들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하마티-아타야(Hamati-Ataya)는 그녀의 2012년

3. 예를 들어, 최근의 논의로 리처드 샵콧(Richard Shapcott)의 인도주의, 국제윤리, 세계주의(cosmopolitanism)에 관한 2010년도 연구를 참조할 것.

도와 2014년도 논문을 통해 “성찰”의 개념을 명료하고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성찰”도 결국 경험적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Hamati-Ataya, 2012: 669-694).

이와 관련하여 아라두(Aradau)와 휴스만스(Huysmans)는 그들의 2014년 연구를 통해 IR 연구 ‘방법’이 경험적/실증적 연구뿐 아니라 비판이론이 추구하는 성찰, 변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유용할 수 있음을 주창하면서 연구방법과 방법론의 “이중적 재개념화(dual reconceptualization)”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실증주의적 시각의 연구방법은 주어진 연구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객관적 혹은 가치중립적 수단으로 이해되지만 연구방법의 “선택”에는 정치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방법은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 없고, 일정한 정치사회의 구성에 있어 “수행적(performative)”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Aradau and Huysmans, 2014: 598-600). 야노우(Yanow)와 슈와르츠-시아(Schwartz-Shea) 역시 그들의 최근 논문에서 연구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지식을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종의 “신임(accreditation)”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Yanow and Schwartz-Shea, 2006: 28).

이러한 비판이론의 연구들은 결국 연구대상과 연구자는 분리될 수 없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자는 연구대상(즉 정치사회현실)에서 중요한 ‘구성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른바 “일원론적” 존재론에 기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Jackson, 2011: 24-40). 이렇게 본다면, IR 비판이론의 존재론은 구성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콕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보자. “국제정치의 구조는 행위자의 간주관적 이해의 산물(intersubjective products)”이며(Cox and Sinclair, 1996: 138), 비록 “구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행위자인 인간이 마치 실제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Cox and Sinclair, 1996: 242). 이와 같은 발언은 IR의 비판이론과 구성주의가 상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이론 사이에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판이론과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간극으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이론의 기능과 이론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두 이론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전술했듯, 비판이론의 시각에서 IR 이론은 정치(권력)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정치적(itself political)이다. IR 이론(theory)과 이론가(theorist) 자신이 국제정치의 ‘현실’과 떼어 수 없는 관계이며 동시에 그것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위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이론가(연구자) 자신이 사회현실의 간주관적/관념적 구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행위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믿음과 함께 비판이론은 현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 도전, 나아가 그것의 변형을 추구한다. 변형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실증주의적 세계관을 따르는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 기정사실로 여기는 현실(예컨대 무정부적 국제질서나 국가의 자구적 선택)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변형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형될 수 있다는 믿음은 국제정치현실과 질서를 주어진 것이 아닌 특정한 사회역사적 조건에서 형성된 하나의 산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만약’ 지금과 다른 사회역사적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현실과 질서는 언제든지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IR 비판이론가들이 사회역사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자기 “성찰적”인 맥락에서 수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비판이론이 구성주의와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도 바로 이곳이다.

물론 구성주의에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비판적 구성주의(critical constructivism) 역시 존재하지만(Kratochwil, 2000), 주지하듯 구성주의 내에서 ‘주류’는 미국 학계의 구성주의, 특히 웬트(Wendt)류의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주류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의 현 질서나 체제의 “변형”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대국가의 기능과 역할(폭력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 세금징수의 독점적 권한, 국제사회에서의 대표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 등) 혹은 국제체제의 (대결적, 경쟁적, 협력적) 속성이 결국 긴 역사적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사회역사적 조건을 바꿀 것인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비판이론가들의 핵심질문은 ‘주류 구성주의’ 연구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주지하듯, ‘주류 구성주의’의 주된 관심사는 규범(norms)이다. 특히 규범에 의해 발생하는 혹은 그것에 의해 유도되

는 행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알아내는 것에 많은 지적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규범의 “타당성”은 관심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떤 규범이 필요하고, 어떤 규범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이른바 “가치중립적(value-free)”인 ‘과학적’ 연구를 추구하는 ‘주류 구성주의’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질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웬트는 구성주의를 포함하는 해석학적 접근을 실증주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과학화’하고자 하였다. 웬트리의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인식론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구조를 ‘객관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었다(Wendt, 1995: 75). 웬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를 실증주의자(“I am strong believer in science ... I am a positivist”)라고 말하기 까지 한다(Wendt, 1999: 39). 호프(Hopf)가 잘 설명했듯, 전통적인 주류의 구성주의자들은 ‘규범’에 관심을 두지만 그들의 연구가 “규범적 어젠다(normative agenda)”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혹은 그것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Hopf, 1998: 183). 애들러(Adler) 역시 주류의 구성주의자들은 “해방이나 주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단언한다(Adler, 1997: 333).

더욱이 비록 사회현실이 물질적 조건 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간주관적 이해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구성적 ‘행위자’에 이론가(연구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구성적 과정에서 연구자 자신의 이론과 지식이 어떤 역할/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불분명하다. 즉, 행위자의 공유된 인식이나 의미체계와 사회현실의 주관적(관념적) 구성을 강조하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히 ‘이론가’ 자신이 구성주의 행위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론적 “성찰” 역시 주류 구성주의의 관심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판이론가들은 바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Weber, 2014: 516-543).

“규범적 어젠다”와 “성찰”의 문제에 둔감한 주류의 구성주의가 국제정치에서 규범과 같은 관념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동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질문, 예컨대 국제정치에서 ‘어떤 규범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윤리철학적 질문에는

침묵함으로써 결국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현 질서에 연계된 규범의 정당화 혹은 지속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Guzzini, 2013: 521-541).⁴

요약하자면, 앞서 상술한 비판이론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통해 기존 주류의 IR이론적 시각들로는 인지하기 어렵거나 당연시되는 사안들을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질서 내부의 “문제풀이”가 아니라 질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새로운 접근과 대안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기회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비판이론은 IR의 연구대상범위를 경험(현상)뿐 아니라 정치철학과 윤리도덕의 영역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더욱 확장된 지식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III. 비판이론의 실천적 공헌과 함의: 한국외교정책에 관한 시사점

비판이론의 중요한 역할은 비단 이론적(학술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앞서 논한 비판이론의 유용성은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실행’의 차원에서도 명료하게 확인된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비판이론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다시 떠올려보자. 이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질서 ‘내부’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지 않고 억압적 질서의 ‘변형’에 있으며 이론가와 이론은 그 질서 형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성찰”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그들의 논리는 한국외교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가장 활발한 논의 혹은 논쟁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일 것이다. ‘미-중 간의 세력경쟁에서 한국은

4. 흥미로운 것은 웬트도 자신의 2003년도 논문,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에서 제시한 실증주의적 주장에 “Why a World State is Democratically Necessary”라고 말하며 규범적 논의를 덧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ttp://wgresearch.org/why-a-world-state-is-democratically-necessary/>(검색일: 2015. 9. 10).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로 흔히 표현되는 이 질문은 수많은 언론기사, 정책제안서, 그리고 학술논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1. “전략적 딜레마”의 비판이론적 ‘해체’와 ‘재구성’

그러나 이 질문이 비판이론을 거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체’될 수 있다. 우선, 질문은 무정부적 국제정치체제 속에서 미-중간의 경쟁/대결을 ‘주어진’ 현실로 혹은 변형 불가능한 구도나 질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고정된 질서 ‘내부’에서 국가행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혹은 할 수 있는가)를 묻는 형식이다. 이렇게 구성된 질문에서 행위자의 역할은 ‘이미’ 상당히 제약받게 되며, 따라서 선택의 범위도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 강화, 친중외교, 그리고 이른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이 그것이다. 주지하듯,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는 정책방향이 한국외교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체’된 질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비판이론의 시각으로 그 질문을 ‘재구성’해보자. 동북아시아의 지역질서는 늘 고정되어 변형된 적이 없는가? 동북아시아의 현(대결적) 질서는 바람직한 것인가? 그 질서는 시공간을 넘어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행위자들이 물리적, 담론적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인가? 그 질서를 형성하는 혹은 그 질서를 수용하는 행위자는 국가(정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특히 이론가(연구자)는 그 질서의 유지와 재생산의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비판이론을 통해 재구성되는 이와 같은 ‘성찰적’ 질문들은, 현 질서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여 질서의 변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질서 ‘형성’의 한 행위자로서 한국이 주체적이며 동시에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하고 담론적 그리고 실천적 성찰을 촉발하게 한다. 예컨대 비판이론가들은 한국이 동북아시아 질서 ‘내부’에서 도출

된 정책(미국 중심 vs. 중국 중심, 혹은 “연미화중”)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대결적 질서의 ‘변형’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 그러한 질서가 ‘구성된’ 역사사회적 조건을 파악할 것을 주문하면서 언어 및 지식의 구성(인과)적 기능에 주목할 것이다. 앞서 자세히 서술한 바와 같이, 비판이론에 따르면 이론 및 이론가는 현실의 중요한 구성단위이다. 그러므로 현 질서가 ‘대결적’이라면 그것은 대결적 언어, 이와 관련된 이론과 지식이 생산되고, 이것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다시 재생산되고 나아가 강화되면서 대결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이론의 시각으로 보자면) 여기서 한국의 외교적 목표는 이 구성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혹은 연결의 출발점을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평등, 자유, 평화, 개방, 공동체, 전지구주의 등과 깊게 연관된 언어와 지식과 담론의 생산 및 확산이 중요해진다.

2. 비판이론적 “성찰”을 통한 ‘담론적 제약’의 해방과 새로운 질서의 모색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이론이 강조했던 “지식권력(knowledge-power)”과 “성찰”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 ‘미-중간의 세력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수많은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학술논문과 저서, 나아가 대중강연과 교내강의를 통해 ‘재생산’되면서 단순한 질문을 넘어 일종의 담론이 된다. 그리고 비판이론과 비판적 구성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잘 보여주듯, 위와 같이 형성된 담론은 강력한 생산성과 수행성을 갖는다(Milliken, 1999; Neumann, 2008). 간략히 말하자면, 주류담론은 곧 사회적 상식(common sense)으로 작동하게 되어 특정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류담론(이른바 ‘상식’)과 배치되는 언행은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하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지되어 결국 배제되거나 주변화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일찍이 갈파했듯 상식적(혹은 정상적)이

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경계만들기’와 ‘구별짓기’를 동반하는 “양자택일(binary)”의 시스템이며, 여기서 비주류는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 선택받기 어려워진다(Derrida, 1981). 따라서 한국외교의 ‘선택’을 묻는 질문은 단순히 질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존재, 그리고 행위를 제약하는 강력한 ‘실재(real)’가 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외교의 실행적 범위를 협소하게 가둬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담론이 언어를 넘어 발휘하는 ‘수행적’ 기능과 제약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한국의 물질적 역량의 한계,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래서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물질만큼(혹은 일부 IR 이론에 따르면 물질 이상으로) 관념이 중요하다. 나아가 만약 물질적 차원에서 주어진 제약을 변형할 수 없다면, 최소한 관념적 차원에서 형성된 ‘담론적 제약’에서는 “해방”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질문’의 도출이며 이를 통한 새로운 언어와 담론의 형성이다. 현 질서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질문에 조용하는 선택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밖’에서 새로운 질문을 도출하고 그 질문을 추동하는 지식을 생산하며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비판이론의 “성찰”은 바로 이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외교관으로서, 학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즉 외교의 현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나의 언어가, 질문이, 의제(agenda)가, 현재의 대결적, 패권적, 차별적, 배타적 질서 ‘내부’에 편입되어 그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현 질서의 재생산, 나아가 그것의 강화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성찰이 지속되면 기존의 질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밖’을 향하고 있는 비판적 언어와 지식의 생산을 추구하게 되며 이는 결국 ‘대안적 담론’의 형성으로 이어져서 다시 한 번 행위자의 성찰을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적 상호작용 과정’의 지속은 대안적인 사회규범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단초가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외교의 목표와 실행의 주된 대상은 새로운 질서의 모색과 그것을 위한 비판적 성찰의 수행으로 설정돼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당장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고,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같은 질문을 또 해보자. 동북아시아의 지역질서는 늘 고정되어 변형된 적이 없는가? 동북아시아의 현(대결적) 질서는 바람직한 것인가? 그 질서는 시공간을 넘어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행위자들이 물리적, 담론적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인가? 그 질서를 형성하는 혹은 그 질서를 수용하는 행위자는 국가(정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특히 이론가(연구자)는 그 질서의 유지와 재생산의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은 질서와 매우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을 ‘해체’한 뒤 재구성하여 ‘대안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비판이론에 있다.

3. 새로운 질서 형성에 관한 비판이론적 제언: “성찰”의 ‘보편적 실천

물론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판이론을 통한 행위자의 ‘대안적 실천’이 현 질서에 균열을 내고 이것이 새로운 질서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의 ‘물질적’ 역량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물질적 역량은 담론의 형성, 특히 그것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동북아시아에서의 상대적 힘의 열세는 한국이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 제약을 극복하거나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행위자(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와의 넓은 연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성찰을 통해 새롭게 추구하는 질서의 모습은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이익이 아닌 전 지구적, 보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중 간의 세력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답으로 제시되는 한미동맹, 친중외교, “연미화중”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작업과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 현

재 진행 중인 ‘중견국 외교’와 관련된 담론 역시 비판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 중견국 외교는 “동류의식(like-mindedness)”의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자적 접근에 기반하여 틈새외교, 중재외교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볼 때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중견국 외교의 ‘목적’이 결국 자국의 부족한 외교적 역량을 보완하고 국익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관련된 “공공외교” 역시 타국의 대중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김우상, 2013). 즉 주어진 질서 ‘내’에서(혹은 현상유지를 전제로) 중견국 ‘자국’의 부족한 국력의 보완과 이익의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Robert, 2007). 이는 물질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외교수단이 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국익’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접근법이다. 더욱이 한국이 겪고 있는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는 기존의 대결적 질서가 ‘변형’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외교적 수단(방법)을 선택해도 ‘근원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딜레마의 형태/형식은 바뀔 수 있겠으나, 딜레마 ‘자체’는 질서가 변형되지 않는 한 해소될 수 없다. 평화, 개방, 평등, 자유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적’ 질서가 새롭게 형성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외교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한 외교보다는 인류 보편적 공동의 이익을 위한 외교를 실행해야 한다. 외교가 자국의 정부나 민족 중심으로 실행될 경우 배타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재의 대결적 질서의 고착화에 일조하는 것이 된다.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의 모색은 보편성을 담보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성찰”의 ‘보편적’ 실천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행위는 미-중 사이의 갈등이나 오인의 해소를 위한 이른바 “조정자” 혹은 “협력 유도자”의 역할 수행을 ‘시작점’으로 하되, 그것을 ‘중착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 동북아시아의 대결이나 경쟁이 물리적 충돌로 점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현안으로써 필수적인 작업이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의

대결적 질서 자체가 ‘변형’되지 않고는 “전략적 딜레마”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질서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조건)에서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해 보자. 물론 물질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외교가 새로운 지역 질서형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한 물질적 역량의 한계는 ‘성찰의 보편적 실천’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해보자. 한국외교는 ‘열린 공동체’ 건설을 아시아 지역에서 우선 추구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타 지역과의 수평적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이슈일 것이다. 한국의 ‘부족한’ 물질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국이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슈이며, 나아가 기존의 대결적 동아시아 질서를 평화적으로 ‘변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즉 평화, 평등, 자유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열린’ 공동체 건설을 통해 새로운 질서형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가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부, 통일부, 교육부의 제도적 공조와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에 잘 조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외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전 지구적 차원의 평등과 평화, 자유 증진에 실질적 공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언어와 담론, 지식의 생산을 위한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통일담론에서 흡수통일 관련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타당성을 주창하는 논의(예컨대 통일 “대박론”이나 통일을 통한 “경제영토의 확장”)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한국외교는 한반도의 통일의 문제를 민족통합의 문제가 아닌 외교와 보편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이란 언어로 다시 치환되어 평화, 조화, 연대와 관련된 보편적 담론형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식과 담론의 문제를 국내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문화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영역으로 적극

끌어들일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 동안 한국외교를 지나치게 ‘구울’했던 냉전담론에 균열이 생기고 21세기 한국외교에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는 계기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유럽연합의 탄생과 진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특히 한반도)의 대결적 구도는 지속되고 있다. 박인휘(2015)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냉전 시기의 대결적 구도가 “주어진 것”이라면 탈냉전의 대결적 구도는 “선택한” 것일 수 있다. 선택적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현재의 대결적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외교는 그 무엇보다 먼저 “전략적 딜레마”라로 묘사되는 ‘담론적 제약’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김기정(2015)은 최근 논의에서, 냉전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 산업화, 민주화가 이뤄진 현 시점에서 한국의 외교가 “생존담론에 지나치게 압도 당해 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앞서 지적했듯, 이러한 ‘담론적 제약’은 단순히 언어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생산 및 확산되면서 ‘실재’의 차원에서 한국외교의 실행적 범위를 협소하게 가둬두고 있다.⁵ 따라서 이러한 ‘담론적 제약’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외교적 고민은 기존의 질서 내부에서 형성된 질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형(즉 “문제풀이형”) 질문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외교정책의 실행자와 연구자들의 자기 ‘성찰’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스스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지에 대한 자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대결적이고 억압적인 질서와 구도에서 “해방”되

5. 언어 및 담론이 외교적 실행에 대해 발휘하고 있는 실질적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보다 분쟁이 더 빈번히 발생하는 중동지역 국가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Teti(2004: 77-105).

는 추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비판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학술적, 실행적 이득은 명확하다. 학술적 차원에서 비판이론은 국제정치의 연구대상범위를 경험(현상)뿐 아니라 정치철학적 영역까지 포함하도록 유도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지식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실천적 차원에서도 비판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시’되는 사안들이 결코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고, 물질적 환원론에 문제‘제기’하도록 하며 보편적 “성찰”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결국 국제정치와 외교의 실행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창발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진다. 기존의 질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문제풀이형’ 질문이 비판이론을 통해 ‘해체’되고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대안적 질문이 도출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언어와 담론, 그리고 대안적인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비판이론은 이렇게 외교의 ‘실행’과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론은 현대 IR에서 “주변화”된 이론 중 하나다. 예컨대 미국에서 IR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 4,126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70%가 스스로를 “실증주의자”라고 답한 바 있으며, ‘IR 이론의 이해’와 같은 기초필수과목에서 비판이론을 가르친 경우는 2004년까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Maliniak et al., 2011: 437-464). 특히 한국 IR에서 비판이론 관련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 25년간(199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국제정치논총과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모든 논문(총 2,589편) 가운데 국제정치 맥락에서 비판이론에 관여한 논문은 구갑우, 조기숙 등의 연구를 포함하여 총 5편을 넘지 않는다(아래 참고문헌 목록 참조할 것). 그러나 이런 현상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모든 지식(이론)에는 일정한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가치중립적일 수 없고, 나아가 IR은 정치권력에 관한 학문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정치적일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하여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적 문제를 명료히 들춰냄으로써 이론적 “성찰”을 유도하는 비판이론연구를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혹은 경험적 검증이나 예측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주변화’ 되도록 놓아두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실증주의에서 강조

하는 경험적 검증은 과학적 지식생산을 위한 유일한 기반이 될 수 없다. 비록 경험적 검증을 통과한 지식이 확실해 보여도 그것은 실증주의가 정해놓은 인식적 틀 ‘내’에서의 확실성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그것에 기초해서 생성된 지식은 “문제풀이형”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현 질서와 그 질서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와 구조가 지속되거나 심지어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탈냉전기에 ‘여전히’ 냉전적 질서에 머물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과, 한국외교를 필요 이상으로 억제하고 있는 대결적 담론과 수동적 언어가 이를 잘 보여준다. 비판이론이 IR에서,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투고일자: 2015-07-01 심사일자: 2015-09-15 게재확정: 2015-9-23

참고문헌

- 구갑우. 2004. 「국제정치경제(학)와 비판이론」. 『한국정치학회보』 38권 2호 pp. 303-325.
- 구춘권. 2001. 「유럽연합의 통합양식 변화와 비판적 통합이론의 도전」. 『한국정치학회보』 35권 3호 pp. 417-436.
- 김기정. 2015. 「대북정책의 진화」. 『한반도 분단 70년의 원인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6월 17일.
- 김우상. 2013.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제1호 pp. 331-350.
- 박인휘. 2015. 「새로운 통일정책의 모색」. 『한반도 분단 70년의 원인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6월 17일.
- 전재성. 2010.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50-2. pp. 35-64.
- 조기숙. 1997.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1-2. pp. 203-232.
- Adler, Emmanuel. 1997.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3): 333.
- Aradau, Claudia and Jef Huysmans. 2014. “Critical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olitics of Techniques, Devices and Ac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3): 598-600.
- Bannister, Robert C. 1987. *Sociology and Scientism: The American Quest for*

- Objectivity 1880-194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Brown, Chris. 1994. "Critical Theory and Postmodern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A.J.R. Groom and Margot Light (eds.),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A Guide To Theory*. London: Pinter Publishers.
- Cox, Robert W. 2012. "For Someone and For Some Purpose: An Interview with Robert W. Cox." In Shannon Brincat Laura, Lima, and João Nunes (eds.), *Critical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Studies: Interviews and Reflections*. London: Routledge.
- Cox, Robert W.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2): 126-155.
- Cox, Robert W. 2007. "The International' in Evolution."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5(3): 513.
- Cox, Robert W. and Timothy J. Sinclair. 1996. *Approaches to World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vetak, Richard. 2014. "A Rival Enlightenment? Critical International Theory in Historical Mode." *International Theory*, 6(3): 417-453.
- Devetak, Richard. 2005. "Critical Theory." In Scott Burchill, et al. (ed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algrave.
- Guzzini, Stefano. 2013. "The en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Stages of Reflexivity and Modes of Theorizing."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3): 521-541.
- Habermas, Jürgen. 1987.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London: Polity Press.
- Habermas, Jürgen. 1988. *On the Logic of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Polity Press.
- Habermas, Jürgen. 2003. "Interpreting the Fall of a Monument." *Constellations*, 10(3): 364-371.
- Halfpenny, Peter. 2014. *Positivism and Sociology: Explaining Social Life*. London: Routledge.
- Hamati-Ataya, Inanna. 2012. "Reflectivity, Reflexivity, Reflexivism: IR's 'Reflexive Turn'—and Beyon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4): 669-694.
- Hamati-Ataya, Inanna. 2014. "Transcending Objectivism, Subjectivism, and the Knowledge in-between: The Subject in/of 'Strong Reflexiv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0(2): 153-175.
- Hansen, Lene. 2000. "Mermaid's Security Dilemma and the Absence of Gender in the Copenhagen School."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9(2): 285-306.
- Hoffman, Mark. 1987. "Critical Theory and the Inter-Paradigm Debat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6(2): 231-249.
- Hopf, Ted. 1998.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International Security*, 23(1): 183.
- Jackson, Patrick. 2011.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London: Routledge.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tochwil, Friedrich. 2003. "The Monologue of "Scien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1): 24-128.
- Linklater, Andrew. 1990. *Men and Citizen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 Linklater, Andrew. 1992. "The Question of the Next Sta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Critical-Theoretical Point of View."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2(1): 77-98.
- Maliniak, Daniel, Amy Oakes, Susan Peterson and Michael J. Tierney. 2011.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US Acade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5(2): 437-464.
- Neufeld, Mark. 1993. "Reflexiv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2(1): 53-76.
- Patomaki, Heikki and Colin Wight. 2000. "After PostPositivism: The Promise of Critical Real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2): 217.
- Shapcott, Richard. 2010. *International Ethics: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Polity Press.
- Stirk, Peter. 2000. *Critical Theory, Politics and Society: An Introduction*. London: Pinter.
- Sylvestre, Christine. 2013. "The Elusive Arts of Reflexivity in the 'Scienc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1(2): 309-325.
- Sylvestre, Christine. 2010. "Tensions in Feminist Security Studies." *Security Dialogue*, 41(6): 607-614.
- Sylvestre, Christine. 1994. *Feminist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Postmodern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onathan H., Leonard Beeghley, and Charles H. Powers. 2011. *The Emergence of Sociological Theory*. London: Sage.
- Weber, Martin. 2014. "Between 'Isses' and 'Oughts': IR Constructivism, Critical Theory, and the Challenge of Political Philosoph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2): 516-543.
- Wendt, Alexander. 1995.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19(3): 75.
- Wendt, Alexander. 2003.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9(4): 491-542.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ght, Colin. 2013.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Walter Carlsnaes, Thomas Risse and Beth A. Simmons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edition. SAGE, 2013.
- Yanow, Dvora and Peregrine Schwartz-Shea. 2006. *Interpretation and Method: Empirical Research Methods and the Interpretive Turn*. New York: M.E. Sharpe.

Critical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Foreign Policy Practice: With a Focus on South Korea

Yong-Soo E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Hanyang University

Although Critical Theory still remains at the margi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it can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improving our understandings of world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it is argued here that Critical Theory can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foreign policy practice.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Frankfurt School as well as contemporary IR studies on Critical Theory while comparing them with mainstream IR theories, namely neorealism,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nd conventional constructivism. More importantly, the article shows what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that Critical Theory has for South Korea's foreign policy in East Asia.

Keywords: Critical Theory, South Korea's foreign policy, discursive constraints, strategic dilemma, middle power diplomacy

